

충남리포트 제59호 2011. 11. 30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 성 호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shong@cdi.re.kr)

목 차

< 요약 >

1. 서론
 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3.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

〈요 약〉

- 충청남도 민선 4기 도정에서는 기업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외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기업 유치에 투자된 재원과 기업유치의 성과-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 유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분석모형에 따라 상이한 혼합된 결과를 나타내며,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유치기업이 이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13~17명 정도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격차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는 유치기업의 고용창출이 이전기업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모든 분석모형에서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업유치시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보다 본사가 함께 이전해 오는 경우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보다 활발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남
- 규모에 상관없이 유치기업은 이전 전에 비해 이전 후에 지역 내 업체와의 거래가 보다 빈번히 이뤄져 산업연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기업에 비해 유치기업의 전략산업 비중이 높아 전략산업의 도내 군집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집적의 경제가 발생함을 기대할 수 있음. 반면, 도내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유치기업의 연구개발, 수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활동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고용창출효과의 증대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의 공급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산학연 합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장과 본사가 함께 이전하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도내 관련 업체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전략산업육성이나 3농 혁신과 같은 도 정책과 관련된 기업의 선별적 유치가 필요함. 더불어, 이전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의 전환을 통해 이전기업과 함께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는 기업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이 고려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유치기업의 지역 내 토착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I. 서론

- 충청남도는 수도권 기업의 유입 등으로 지역 수출액, 지역내 총생산(GRDP)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별 연평균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전산업에 대한 수치는 8.03%, 제조업에 대한 수치는 12.87%로 나타나 전국 수치인 3.75%(전산업)와 4.73%(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를 포함하는 16개 광역시도별로 계산된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충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단연 높게 나타난다. 충남 다음으로 경기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의 수치도 5.88%(전산업)와 7.93%(제조업)에 불과하여 충남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기업의 경우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고용창출에 그다지 큰 공헌을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등과 같이 오히려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에서는 기업의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어 왔으며, 기업 유치에 투자된 재원과 기업유치의 성과 - 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 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또한 실적에 치중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기업유치 정책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및 토착화의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의 민선 4기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기업유치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유치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1.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정의는 충남도로부터 이전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에 한정하며, 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고용창출, 산업연관,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한정하되, 고용창출과 산업연관에 관해서는 기여의 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기존에 도내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기존 기업)이나 이전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이전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은 유치기업의 이전 전후 고용변화에 대한 다양한 회귀식의 추정을 이용하고, 산업연관효과에 대한 분석은 유치기업의 이전 전후 생산, 도내 업체로부터의 구매,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공급의 변화를 비교하고 충남의 전략산업이나 이의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비교한다.

(2) 자료

-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충남도에서 제공한 유치기업(62개)과 이전기업(188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개별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포함하는) 원자료(2006, 2009)를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설문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2. 분석결과

(1) 고용창출

- <표 1>은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도내 이전 전후 고용변화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그리고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고 있으며, 통상최소자승법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전 전후의 고용변화, 다시 말해 도내로 이전해 온 이후의 고용에서 도내로 이전해 오기 이전의 고용을 뺀 것이고 고정효과모형과 이중격차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전 전후 각각의 고용에 해당한다.
- 통상최소자승법에서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 전후 고용변화는 이전기업의 고용변화에 비해 평균적으로 13~17명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전 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창출효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통상최소자승법이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의 여러 특성들-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의 고용, 이전해 온 지역과 연도, 제조업 여부, 본사를 제외한 공장만 이전해 온 경우(분공장, branch plant)-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더미변수(고정효과)가 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추정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전보조금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전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상용직) 고용창출효과의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OLS			Fixed Effect		Difference-in-Differences	
	(1)	(2)	(3)			(1)	(2)
유치기업	13.0933 (1.76) ⁺	13.5044 (1.81) ⁺	17.1445 (1.74) ⁺	이전보조금	0.0017 (1.09)	유치기업	83.2565 (6.04) ^{***}
이전보조금			-0.0026 (0.80)			이전보조금	0.0262 (2.70) ^{**}
						이전 후	3.6515 (0.55)
이전 전 고용	0.0209 (0.25)	0.0212 (0.26)	0.0271 (0.34)			이전 후*유치기업	4.8646 (0.21)
천안·아산·당진	-0.1065 (0.04)	0.1896 (0.08)	0.2744 (0.11)			이전 후*이전보조금	0.0002 (0.01)
분공장		-4.1199 (1.01)	-4.4944 (1.04)			분공장	-0.3091 (0.03)
제조업	-3.6594 (0.77)	-3.9316 (0.84)	-5.0714 (1.03)			제조업	31.3587 (3.77) ^{**}
2005년	-9.6817 (2.10) [*]	-9.6547 (2.11) [*]	-8.7136 (1.93) ⁺			2005년	8.2677 (0.46)
2006년	-4.4618 (0.42)	-4.2561 (0.39)	-4.6471 (0.43)			2006년	21.0032 (1.19)
2008년	3.6050 (1.22)	3.7426 (1.21)	4.3611 (1.31)			2008년	13.4681 (1.74) ⁺
2009년	0.6415 (0.25)	0.4995 (0.19)	1.4015 (0.52)			2009년	0.0117 (0.00)
2010년	-17.8722 (1.17)	-17.2511 (1.14)	-18.7567 (1.26)			2010년	57.0456 (1.25)
2011년	-36.1967 (1.56)	-37.0565 (1.59)	-37.1463 (1.63)			2011년	40.4430 (0.81)
상수항	4.8694 (0.90)	6.6936 (1.17)	7.1331 (1.21)	상수항	59.8862 (59.00) ^{**}	상수항	-9.6767 (0.89)
				고정효과 개별 기업	194		
Adj. R ²	0.0284	0.0295	0.0325	R ²	within between overall	Adj. R ²	0.2387
					0.0061 0.1433 0.0696		0.2279
관측수		194		관측수	388	관측수	38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robust t-값;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 고용에서의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간 차이,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의 시점 간 변화-도내로의 이전 전후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이중 격차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기업의 고용이 이전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83명 많았으며 도내로의 이전 후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모두 평균적으로 4명가량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치기

업의 고용증가는 이전기업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¹⁾

<표 2> 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 고용규모에 따른 유치기업의 집단 간 이전 전후 고용변화의 비교

표본	구분	이전 전후	고용(명)	t-값
전체 (N = 62)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30.8 140.0	1.53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23.5 132.0	1.62
60인 이하 (N = 2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42.6 52.1	4.29**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42.1 51.0	4.23**
61-100인 (N = 2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85.9 101.4	4.76**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85.9 101.0	4.79**
101인 이상 (N = 20)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70.6 273.0	0.13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248.3 249.5	0.08

주 : t-값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의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과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유치기업의 이전에 따른 절대적 고용변화는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 모두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폭은 10%의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영(0)과 다르지 않아 유치기업이 도내로 이전한 후에 이의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에 비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 유치기업의 이전하기 전 고용규모에 의해 62개의 유치기업을 3개의 집단

1) 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2006, 2009)를 이용하여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해 온 사업체와 도내에 지속적으로 입지해 있던 사업체와의 고용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가 부록에 제시되며, 이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기존에 도내에 입지해 있던 기업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지 않으며 단지 소규모 기업군에서만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으로 구분한 후에 이들 집단 간 이전에 따른 고용변화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초기 고용이 60인 이하인 유치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이 9.5명가량 증가하였고 상용직 고용은 8.9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 고용이 61인 이상 100인 이하인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이 유사하게 대략 15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01인 이상의 초기 고용을 가지고 있던 유치기업은 이전에 따른 고용의 증가가 전체 고용과 상용직 고용에서 각각 2.4명과 1.2명으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가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는 표본에서 중간 규모의 초기 고용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3>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 간 유치기업 고용변화의 비교

표본	구분	이전 전후	고용(명)	t-값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 (N = 3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19.8 134.7	2.24*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11.7 123.9	1.84+
공장만 이전 (N = 31)	전체 고용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41.8 145.4	0.35
	상용직	이전하기 전 이전한 후	135.2 140.0	0.59

주 : t-값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의 고용이 이전 전의 고용과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유치기업을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와 공장만 이전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전 전후 고용의 변화를 집단 간 비교하면,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한 경우 전체 고용은 이전 전의 119.8명에서 이전 후의 134.7명으로 평균적으로 14.9명만큼 증가하였으며 상용직 고용의 경우 111.7명에서 123.9명으로 12.2명만큼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폭은 각각 5%와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공

장만 이전한 경우 전체 고용은 이전 전의 141.8명에서 이전 후의 145.4명으로 3.6명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지 못한다. 유사하게, 상용직 고용 역시 이전 전후 고용이 평균적으로 4.8명만큼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외지에 본사를 둔 분공장의 유치는 해당 분공장이 지역경제와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에 제한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2) 산업연관

-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이전 전후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중간재 구매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공급비중 모두에 대해 유의한 응답을 한 업체는 49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49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물가의 상승이 고려된 실질 생산은 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에 비해 이전해 온 후에 오히려 감소한 반면 도내 업체로부터의 구매비중이나 공급비중은 각각 5.2%p와 4.0%p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²⁾
- 분석을 도내로 이전해 오기 전의 명목 생산액 기준 250억원 이하의 업체(24개)와 이를 초과하는 업체(25개)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생산규모가 작았던 업체들은 이전 전후 실질 생산액의 증가를 경험한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규모가 컸던 업체들은 실질 생산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구매비중이나 공급비중의 변화는 두 집단 모두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증가폭은 두 집단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전을 전후로 실질 생산의 감소는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거나 국가전체의 경기변동-즉, 불경기-에 기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을 전후로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기존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을 전후로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 공급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도내 업체로부터의 수요의 부재와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난다.

<표 4> 유치기업의 실질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중간재 구매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중간재 공급비중의 이전 전후 변화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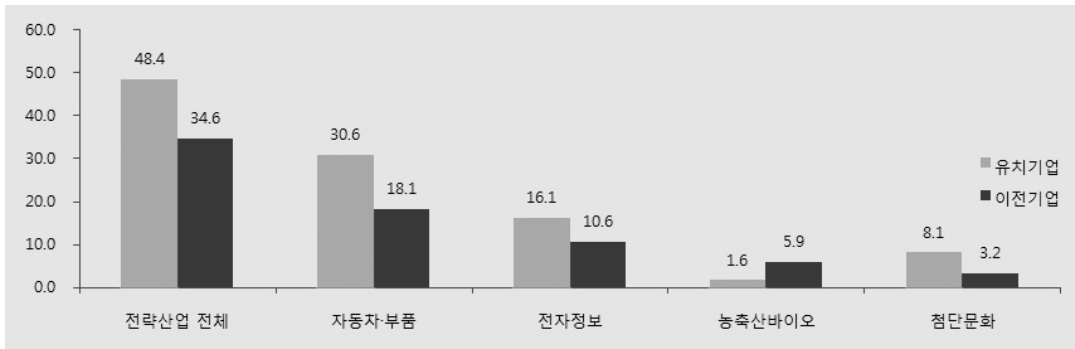
표본	구분	이전 전후	생산액/비중	t-값
전체 (N = 49)	실질 생산	이전하기 전	55,705	-0.73
		이전한 후	47,349	
	구매비중	이전하기 전	19.3	5.96**
		이전한 후	24.5	
	공급비중	이전하기 전	29.8	3.47**
		이전한 후	33.8	
250억원 이하 (N = 24)	실질 생산	이전하기 전	12,044	1.68
		이전한 후	15,965	
	구매비중	이전하기 전	20.2	3.84**
		이전한 후	24.6	
	공급비중	이전하기 전	30.0	3.14**
		이전한 후	32.5	
250억원 초과 (N = 25)	실질 생산	이전하기 전	97,621	-0.91
		이전한 후	77,478	
	구매비중	이전하기 전	19.5	4.51**
		이전한 후	24.4	
	공급비중	이전하기 전	29.6	2.57*
		이전한 후	35.0	

주 : t-값은 유치기업의 이전 후의 실질 생산액,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비중, 그리고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비중이 이전 전의 그것들과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가운데 충남의 전략산업-자동차·부품, 전자정보, 농축산바이오, 그리고 첨단문화-에 해당하는 업체수의 비중을 유치

기업과 이전기업 간 비교하면, 유치기업의 경우 48.8%가 전략산업에 해당하여 이전기업의 34.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그리고 첨단문화에서 유치기업의 비중이 이전기업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며, 단지 농축산바이오에서만 이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전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

<그림 1> 유치기업과 이전기업 가운데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수 비중(%)의 차이



- 충남의 투입산출(IO)구조에 기초하여 전후방 연관성이 가장 큰 5개의 산업(KSIC)을 확인한 후에 유치기업과 이전기업의 해당여부를 분석한 결과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어느 업체도 전후방 연관성이 큰 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2.7%, 종사자수 기준으로 3.3%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이나 고용측면에서 유치기업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볼 수 있다.

3) 개별 전략산업 간에 일부 산업코드(KSIC)는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 전략산업의 비중이 전체 전략산업의 비중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3) 연구개발, 수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오염

- 62개의 유치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50개(80.6%)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인원은 7.4명으로 나타난다. 이들 50개 업체는 도내에서도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속한 평균 인원은 7.0명으로 조사된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상시 기술개발 전담부서(31개 업체)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27개), 임시 기술개발 전담(T/F)팀(21개), 그리고 전담부서 없이 생산부서에서 수행(7개)하는 형태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5>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유치기업의 기술개발 전문인력(상시직 내부인력)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독립연구소 포함)		상시 기술개발 전담부서		임시 기술개발 전담팀(T/F팀)		전담부서 없음 (생산부서에서 수행)		합계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업체수	인원수
도내 + 도외	27	5.4	31	3.7	21	4.2	7	2.7	50	7.4
도내	26	5.1	30	3.7	20	4.2	7	2.7	50	7.0

- 유치기업 가운데 2010년 기준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40개(64.5%)로 이들의 2010년 수출실적은 평균적으로 16,992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62개 유치기업 전체의 평균 수출 실적은 10,963천 달러로 나타난다.
- 충남으로부터 이전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한 유치기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수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혹은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다.

- 충청남도 도청의 이전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92개의 표본 기업들 가운데 76개(82.6%) 업체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용량 이하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유치기업의 경우 6개 업체가 오수를 배출하지만 이들의 평균 처리 혹은 재활용률은 98.3%에 달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6개 업체 모두는 배출하는 폐수의 전량을 처리 혹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폐기물의 경우 37개 (59.7%) 업체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이들의 평균 처리 혹은 재활용률은 57.3%로 오·폐수에 대한 처리 혹은 재활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Ⅲ.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1. 지역경제 기여도 증대

(1) 고용창출

-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전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이전해 오기 전의 종사자수가 100인 이하인 업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전후 고용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적어도 단기에 있어 이전 후의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유치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전 전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사유 가운데 경기변동적 요인을 제외하고 지원자 부족, 지원자의 숙련도 혹은 경험 부족, 그리고 높은 임금이 지적되었으며, 이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전문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기업 맞춤형 산학연관 합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공장 가설의 검증 결과는 기업의 유치가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를 포함함으로써 유치된 기업의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함축한다.

(2) 산업연계 강화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치기업의 도내 이전 이후에 도내 업체로부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 혹은 도내 업체에 대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가는 유치기업의 초기 생산액 규모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치기업과 기존 도내 업체와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매와 공급을 통한 연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도내 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유치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개별 시·군의 산업집적과 지리적으로 군집한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기업유치정책을 펴므로써 기업유치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별적 기업유치

- 충남의 기업유치정책 가운데 하나는 도의 전략산업이나 핵심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전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기업유치정책은 전략산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 혁신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내 개별 시·군의 기업경영관련 기반시설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유치대상 기업과 입지대상 지역 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유치기업과 해당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전보조금 지원 정책의 개선

-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유치정책 자체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결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최근에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들 가운데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며, 이는 이전보조금의 지원 없이도 외지기업의 도내로의 이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이전보조금 이외의 사항-이를 테면, 충남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임대료) 혹은 도내의 저렴한 원자재 및 중간재-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이전보조금 위주의 기업유치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치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⁴⁾

(5) 근로자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유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동반가족에 의한 지역 내 소비의 증가라고 할

4) 변용환 외(2009)는 직접적인 이전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인센티브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여 공장의 신증설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적단지 내에서 건물, 통신, 전기, 수도, 임대료 등이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되어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사회간접자본 인센티브의 강화를 주장한다.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출신지 기준 외지인의 비율은 국가산단에서 18.0%, 일반산단에서 35.5%,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41.5%로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도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외지에서 이전해 온 유치기업의 경우 가족과의 비동거 근로자 비율이 보다 높아 지역 내 소비증가의 효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치기업의 종사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도내에 이주하여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한 기업유치정책의 추진

- 설문조사에 참여한 62개 유치기업 가운데 단지 13개 업체만이 계획입지(산업단지) 내로 이전을 했을 뿐 나머지 유치기업들은 개별입지로 이전하여 충청남도의 계획입지 유도방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정책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유치기업의 토착화

(1) 유치기업의 정책 수요

-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유치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기반시설 확충, 운영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자금지원이나 판로확보도 후순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표 6> 유치기업 대상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운영자금 지원	14	22.58	13	20.97	8	12.9
기반시설 확충	19	30.65	11	17.74	6	9.68
전문인력 양성	14	22.58	16	25.81	13	20.97
산학연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5	8.06	6	9.68	7	11.29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자금, 판로, 인력확보)	7	11.29	13	20.97	21	33.87
기업 홍보 및 중계	3	4.84	3	4.84	7	11.29

(2) 유치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 유치 혹은 이전기업의 경우 이전 후에 낮은 지역 내에서 경영상의 많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취업박람회, 고용촉진훈련, 인턴사원제, 취업알선센터 등을 운영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주민과 이전기업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

- 기업은 도로의 혼잡이나 공해 혹은 소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야기하기 때문에 간혹 유치기업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초래한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의적인 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는 외부인과 외부기업이 배타적인 느낌을 갖지 않도록 외부 자본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

동을 전개하여 지자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친기업적 정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강법식·김덕모, 2006). 더불어, 유치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유치실적 관련 DB의 정확성 개선

- 외지기업의 지역 내 유치 후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 내 현지토착화 되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치 혹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DB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 충남은 우리나라의 중위 입지(median location)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접하고 지가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기업유치정책의 개선은 지역 내 고용창출, 지역 내 산업과의 연계강화, 지역 내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수출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강법식·김덕모(2006), 기업관계자가 본 광주·전남의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국토연구』
Vol. 49, pp. 39-54, 국토연구원.
- 변용환 외(2009),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Vol. 13(2), pp. 157-181

홍 성 요, shong@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9

◆ 부 록 ◆

<표 A1>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고용			상용직		
	(1)	(2)	(3)	(4)	(5)	(6)
상수항	0.1000 (1.62)	3.8387 ⁺ (1.79)	3.6666 ⁺ (1.80)	0.0548 (0.93)	3.7041 ⁺ (1.97)	3.5348 [*] (2.00)
이전기업	1.1795 (0.75)	1.6802 (1.30)	1.2004 (0.94)	1.2332 (0.96)	1.7646 ⁺ (1.79)	1.2958 (1.34)
초기 고용		-0.0857 (1.11)	-0.0861 (1.12)		-0.0897 (1.13)	-0.0902 (1.13)
단독 사업체		-3.6845 ⁺ (1.85)	-3.5660 ⁺ (1.87)		-3.6973 [*] (2.01)	-3.5812 [*] (2.04)
남성 CEO		0.3839 ⁺ (1.83)	0.3093 ⁺ (1.82)		0.3308 (1.58)	0.2579 (1.54)
제조업			1.0921 ⁺ (1.78)			1.0675 ⁺ (1.73)
Adj. R ²	0.0000	0.0690	0.0694	0.0000	0.0834	0.0838

주 : 괄호 안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절대치)으로, 이는 시군구-대분류 산업수준에서 이분산과 계열상관을 고려한 Huber-White의 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수는 2006년과 2009년 모두 도내에 입지해 있던 88,785개의 기존 기업과 2006년과 2009년 사이 도내로 이전한 236개의 이전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 도내에 지속적으로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 간의 이전 전후 고용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도내로의 이전 전후(2006년과 2009년) 고용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이전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정(+)의 계수를 가져 기존 기업의 고용에 비해 이전기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⁵⁾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존 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5) 개인 사업체인 경우 단독 사업체이거나 대표자가 남성일 가능성이 커, 조직형태에 대한 더미변수는 회귀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A2> 시군구-산업(중분류)-초기 고용에서 이전기업과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만을 대조군으로 포함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고용			상용직		
	전체	5인 이하	6-50인	전체	5인 이하	6-50인
상수항	16.3650 (3.76)**	2.6388 (7.10)**	17.9513 (6.36)**	15.1289 (3.50)**	2.3081 (8.07)**	13.9123 (5.89)**
이전기업	7.4669 (4.63)**	0.0422 (0.25)	2.2831 (2.96)**	6.7284 (4.47)**	0.3291 (1.93) ⁺	1.9142 (2.63) [*]
2009	0.3491 (3.12)**	0.2752 (3.73)**	1.0948 (1.52)	0.1326 (1.51)	0.0614 (1.86) ⁺	0.8578 (1.38)
이전기업 * 2009	0.9305 (0.58)	3.6852 (2.51) [*]	2.7187 (1.69) ⁺	1.1555 (0.88)	3.5228 (2.48) [*]	2.0660 (1.83) ⁺
단독 사업체	-14.9307 (3.35)**	-0.8963 (2.64)**	-8.3347 (4.51)**	-15.2633 (3.45)**	-2.1065 (7.91)**	-7.9765 (4.47)**
남성 CEO	0.4809 (2.32) [*]	0.2710 (3.72)**	-0.9049 (0.45)	0.4856 (2.47) [*]	0.2560 (3.55)**	0.8234 (0.59)
제조업	11.0945 (5.78)**	1.3262 (2.87)**	5.8066 (3.30)**	11.3045 (6.01)**	1.3629 (3.10)**	6.5790 (4.28)**
Adj. R ²	0.2023	0.0890	0.1129	0.2102	0.1157	0.1541
N(이전/기존)	236/3,099	101/2,852	118/232	236/3,099	101/2,852	118/232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절대치)으로, 이는 시군구-대분류 산업수준에서 이분산과 계열상관을 고려한 Huber-White의 robu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함

- 이전기업의 상대적 고용창출효과는 이전기업에 대한 더미변수와 2009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간 교차항인 이전기업*2009의 계수값을 통해 추정되며, 이는 분석의 대상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존 기업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표본을 초기 고용이 5인 이하인 사업체로 한정하면 이전기업이 기존 기업에 비해 고용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A3> 이전기업과 동일한 시군구-중분류 산업에 속하며 세세분류에 의한 산업, 조직유형, 사업체 형태, 대표자의 성별에서 유사성이 가장 큰 기존 기업 가운데 초기 고용의 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존 기업과 이전기업 간 고용의 변화에 대한 초기 고용의 규모별 분석결과

표본	구분	이전여부	고용변화(명)	t-값
전체 (N = 466)	전체 고용	이전기업	1.06	-0.05
		기존 기업	1.14	
	상용직	이전기업	0.96	0.14
		기존 기업	0.76	
5인 이하 (N = 202)	전체 고용	이전기업	3.96	2.43*
		기존 기업	0.42	
	상용직	이전기업	3.58	2.21*
		기존 기업	0.37	
6-50인 (N = 232)	전체 고용	이전기업	3.68	1.04
		기존 기업	1.59	
	상용직	이전기업	2.75	1.28
		기존 기업	0.93	
51인 이상 (N = 32)	전체 고용	이전기업	-36.31	-2.63*
		기존 기업	2.43	
	상용직	이전기업	-28.50	-2.32*
		기존 기업	2.06	

주 : t-값은 이전기업의 고용변화와 기존 기업의 고용변화가 동일함을 귀무가설로 하며,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전체 고용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를 포함하며, 기존 기업은 2006년과 2009년 모두 충남에 입지해 있는 기업을 지칭함

- 236개의 개별 이전기업에 대해 2009년에 동일한 지역(시군구)-산업(중분류)에 속하고 2006년에 가장 유사한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세세분류에 의한 산업, 조직형태, 사업체 유형, 대표자 성별 등에서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1개의 기존 기업을 추출하여 개별 이전기업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표본을 구성한 후에, 두 시점(2006년과 2009년) 간 고용변화의 집단 간 차이의 유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⁶⁾ 233개의 이전기업과 이에 대해 일대일로 매칭되는 233개의 기존 기업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두 집단 모두 2009년의 고용이 2006년의 고용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기존 기업의 고용증가가

6) 236개의 이전기업 가운데 일대일로 매칭되는 기존 기업이 부재한 경우가 3개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 3개의 이전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평균적으로 오히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⁷⁾ 반면 상용직 종사자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기업의 고용증가가 기존기업의 고용증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표본을 초기 고용이 5인 이하인 사업체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전체 고용과 상용직 종사자수 모두에서 이전기업의 고용증가가 기존기업의 고용증가에 비해 약 3.2~3.5명가량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전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볼 수 있다.
- 분석을 초기 고용이 6인 이상 50인 이하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전기업이 기존 기업에 비해 보다 큰 고용증가를 경험하였지만 증가의 정도가 초기에 5인 이하의 고용을 가지고 있던 사업체 보다 약할 뿐만 아니라 이전기업과 기존 기업 간 고용증가의 차이가 10%의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 비록 표본수는 작지만, 초기 고용이 5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기존 기업의 고용이 증가한 반면 이전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고용변화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7)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아 두 집단 간 고용변화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사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